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12. 26.(화) 11:00 < 12.27.(수) 조간 > 배포 2023. 12. 26.(화)

해외 무역장벽, 민관 원팀으로 대응하여 수출 우상향 뒷받침

-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신속·효과적인 무역장벽 대응
- 수출기업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례 점검 및 확대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2.26.(화) 16:30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 주재로 관계부처,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대한상의·코트라와 함께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연2회 정례 개최 중으로, 금년 상반기 협의회는 6.14(수) 개최(통상교섭본부장 주재)

참석자들은 금번 회의를 통해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성공적 대응 사례를 공유하였다. 또한 업종별 협회는 외국의 반덤핑 조치 및 일몰재심 조사 사례에 대한 대응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원산지·인증·서류 등 통관 애로, 환경·공급망 등 新통상 이슈와 결부된 수입규제에 대한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지속 공조해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동 협의회 계기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2023년 한 해 동안 보호무역조치 대응 과정에서 우리기업의 애로 해소 및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헌한 유공자*들에게 장관 표창도 수여하였다.

* ㈜DKC 김민균 이사, 삼정회계법인 남진영 이사, 포스코 전평수 그룹장, 법무법인 광장 우한얼 辯, 산업부 이동주 事, VBB Victor Crochet 辯, Akin Gump Yujin McNamara 辨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지금의 수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의 협력과 소통을 보다 강화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다자통상법무관 통상법무기획과	책임자	과 장	손호영 (044-203-5940)
		담당자	사무관	이창우 (044-203-594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협의회 개요**

1. 회의 배경

1 **(목적)** 주요 교역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현황을 점검**하고,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등과 함께 **민·관 대응을 강화**

* 상반기 회의 무역장벽 대응 협의회는 '23.6.14 旣개최(통상교섭본부장 주재)

2 **(기대효과)** 정부-민간 상호간 **정보 공유** 및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투자 확대 지원**

2. 회의 개요

1 **(일시·장소)** '23.12.26(화) 16:30~18:00, 서울 트레이드타워 51F 중회의실

2 **(주최·주관)** 산업부 / 무역협회

3 **(참석대상)** 다자통상법무관(주재), 관계부처(외교부, 특허청, 관세청 등),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코트라·대한상공회의소 등

3. 세부 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6:30~16:40 (10분)	▪ **2023년 수입규제대응 유공자 포상 시상식**	다자통상법무관
16:40~16:45 (5분)	▪ **모두발언**	다자통상법무관
16:45~16:50 (5분)	▪ **對韓 수입규제 동향 및 대응계획**	통상법무기획과장
16:50~16:55 (5분)	▪ **주요국 수입규제 관련 이슈 점검 및 전망**	무역협회
16:55~17:00 (5분)	▪ **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	대한상공회의소
17:00~17:05 (5분)	▪ **해외 비관세장벽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	코트라
17:05~17:55 (50분)	▪ **업종별 수출애로 청취 및 토론**	-
17:55~18:00 (5분)	▪ **마무리발언**	다자통상법무관

붙임 2 **2023년 무역장벽 대응 지원 관련 주요 사례**

#1. (인도네시아) 통관애로 해결 및 스마트시티 사업수주 지원

■ **(개요)** 스마트시티 실증사업에 스마트 가로등용 LED 센서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인니 세관이 수입주체가 발주 기업이 아닌 인니 지방정부로 설정*되었다는 이유로 통관 거부

* 인니에서는 통관을 위해 세관 통관번호가 필요하나, 정부는 세관 통관번호가 없어 현지 세관에서 통관 절차 지연

- 프로젝트 실증사업 납기일을 지키지 못해 수주 무산 위험이 있었으며, 현지 세관이 지정한 물류창고에 제품을 보관할 의무가 있어 창고 이용료 등 물류비 낭비 발생

■ **(대응경과)** 코트라 현지 무역관이 상무관, 관세관과 함께 해당 수출품이 인니 지방정부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핵심 납품물품임을 증명하고 우리 기업과 함께 현지 세관 보완 요청사항 등을 반영한 서류 준비 지원

■ **(대응결과)** 통관 문제를 해결하여 프로젝트의 실증사업 기한 내 제품 납부 완료

- 해당 우리 기업의 최초 인니 수출(2,120$) 달성
- 해당 기업은 인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실증사업 최종 수주에 성공하며, '24년 3,200만$ 규모의 프로젝트 수주 기반 마련

#2. (미국) 한국산 대구경강관 상계관세 3차 연례재심 대응

■ **(개요)** 美 상무부가 대구경강관 상계관세 3차 연례 재심조사 개시('23.7)

- 당시 2차 연례 재심 최종판정 결과('22.11)에 따라 1.66%의 관세가 부과되던 상황

■ **(대응경과)** 정부는 의견서 제출, 공청회 대응 등을 통해 조사 대응을 지원하였으며, 대한상의도 수입규제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답변서 제출을 지원

■ **(대응결과)** 3차 연례재심 최종 판정('23.12) 결과 관세가 인하(1.66% → 1.54%, 0.12%p(약 7%) 감소)되어 기업의 수출 부담이 경감

#3. (필리핀) 반도체 시장진출 애로 해소 지원

■ **(개요)** 필리핀 정부는 사전 통보 없이 현지 진출 우리기업을 검문하여, 150만 페소의 벌금과 OMB(필리핀 광학미디어위원회) License* 발급 및 Export Permit 이력 제출 요구

* 우리 기업의 제품은 관련 법률의 규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필리핀측이 자체적으로 규제대상 범위 확대 적용

- 해당 업체는 주문 건별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어 Export Permit 발급이 어려운 상황

■ **(대응경과)** 현지 대사관과 무역관이 협력하여 한-필 기업환경개선 포럼을 개최하고, 필리핀측과 MOA를 체결하여, 필리핀 공기업이 수출허가를 대행하도록 지원

■ **(대응결과)** MOA 체결을 통해 관련 기업의 수출허가 프로세스가 간소화